

‘속전속결’ 차관 교체→尹 징계위 강행...정당성 얻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틀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져 나오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반발해 사표를 내자 법무부와 청와대는 이틀 만에 후임 차관을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 위해 순식간에 후임자를 지목한 모양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

고기영 차관,尹징계 반발 사표...이틀만 교체 ‘尹징계 위한 인사’ 비판 예상...징계위 불신 ↑

부 내부에서도 내용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고 차관의 후임 차관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신임차관 임기는 오는 3일부터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했고, 이틀 만에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 4월27일 임명돼 약 7개월 만에 차관명함을 반납하게 됐다. 전임자인 김오수 전 차관이 2년 가까이 차관직을 수행한 것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다.

고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고심 끝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데, 사표를 통해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차관 교체로 응답했다.

추 장관은 전날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을 신임차관으로 내정했다.

최근 인사로 분류되던 고 차관을 숙고 없이 바로 내보내고, 최초의 비검사 출신 인사를 후임에 내정한 것은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법무부는 신임 차관이 임명되면 계획대로 윤 총장 징계위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임 차관이 윤 총장 징계를 위해 투입된 것이라는 의심은 불가피해 보인다. 신임 차관이 주관하는 징계위 심의와 의결에 대해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적

정했다는 검찰위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점도 앞으로 열릴 징계위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전남 감찰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찰의 후속 조치인 징계 청구 등도 취소돼야한다는 취지다.

감찰위원 7명 중 4명은 추 장관이 임명했음에도, 일치된 의견이 나온 것이다.

감찰위원 3명은 “감찰 내용이 부당하고, 징계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감찰위는 다수결을 진행한 끝에 감찰 절차만 문제삼았으나, 감찰 내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셈이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둘러싼 내부 비판도 감찰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박 담당관의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은 감찰위에서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감찰위에서 박 담당관은 “보고드렸고 결재까지 하셨지 않느냐”고 언성

을 높였고, 류 감찰관은 “결재한 것은 문서를 송부하는 것이었다. 내용을 나한테 보여줬느냐”고 받아쳤다

고 한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사외위가 이뤄졌다고 폭로한 이경화 대전지검 검사와도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위원들은 “누가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느냐”고 물었고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이 삭제하라고 했다”고 답했고, 박 담당관은 곧장 “나는 삭제 지시한 적 없다”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보던 류 감찰관이 웃음을 짓자 박 담당관은 “왜 웃느냐, 날 망신주려는 것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고 한다. 법무부가 처음부터 윤 총장 징계를 염두에 두고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감찰관실 소속 검사가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취지 우려를 표했음에도 개정됐고, 감찰 위원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우기자

5·18단체, 역사 왜곡 책 또 펴낸 지만원에 법적 대응

1심서 유죄 판결 받고 또 북한군 개입 주장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5·18역사 왜곡 신간 출판물을 낸 극우 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씨가 지난 6월 발간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 원고 9명은 이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5명은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지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이번 민·형사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최목·정다은·박수영 변호사가 맡는다.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

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씨는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지씨는 명예훼손 혐의도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의 책을 또 발행했다.

5·18단체는 “지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인정액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서선옥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500명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대로 다시 늘어난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시 가막만 등 4곳서 침적폐기물 수거 착수

가막만·목포북항·영종도·통영항 주변해역 311t 수거 추진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박승기)은 이달 말까지 여수시 가막만 주변해역 등 4곳에서 총 311t의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해양관리청에서 수요 조사한 여수시 가막만 주변해역, 목포시 목포북항, 인천시 영종도 주변해역 3곳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았다. 그 결과 총 면적 560ha 대상 약 131t의 해양 침적폐기물을 확인했다. 또 통영시 통영항은 재침적량 사후 모니터링 용역 결

과 총 면적 151ha 대상 약 180t의 해양 침적폐기물이 확인됐다.

공단은 이번 4곳의 주변 해역 침적폐기물의 성공적인 수거를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선 및 인양틀·OPG(Orange Peel Grab), 크레인부선, 잠수사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를 통해 안전한 선박운항 및 깨끗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 의장들, 광주시에 ‘나주SRF 해결’ 촉구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방문 연대 서명서 전달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서명서를 통해 한 마음으로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2일 김영덕 의장이 광주시를 방문해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연대 서명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 촉구 서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서에는 나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혁신도시와 전남도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주시가 ‘광주권 SRF는 광주에서 전량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덕 의장은 당초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전남 22개 시·군 의회의 뜻을 모은 서명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면담이 불발되자 김 의장은 광주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서명서를 광주시 관계자에 전달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